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량을 뽑는 제5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은 광주시장·전남지사 등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선출한다. 여기에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시·도 교육감, 교육위원도 뽑는다. 내년 광주·전남 지방선거에서 눈여겨봐야 할 관련 포인트를 짚어봤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간에 정권 재창출과 정권 탈환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여야 간의 치열한 격전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메가톤급 변수들이 정국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 여야가 어떠한 해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성적표의 명암이 갈릴 예정이다.



■ 관전 포인트

광주시장·전남지사 3선 통과할까

박시장 U대회 유치·박지사 지명도 등 강점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의 3선 성공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석형 합평군수를 제외하고 현재 3선 기초단체장도 없다. 그만큼 '3선 등극'이 어렵다는 증거다. 박 시장은 지난달 24일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3선 가도'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이다. 현역 단체장이라는 프리미엄에 하계U대회 유치 성공이라는 추진력까지 인정받아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다. 박 시장의 대항마로는 무소속 강운태 의원과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전갑길 광산구청장,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동철·이용섭 의원,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전윤철 전 감사원장, 양형일 전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다. 최근 장승우 전 여수엑스포 조직위원장도 부상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강운태 의원과 정동채 전 장관이 인지도에서 박 시장을 뒤따르고 있지만, 선거가 임박하면서 '노풍'이 불게 되면 노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참여정부 인사인 정찬용 전 인사수석·이용섭 의원 등이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J프로젝트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골격을 쥐는 등 야당 단체장의 설움이 3선 가도를 더디게 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누구보다 지명도에서 앞선 박 지사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지사에 맞설 인물로는 재선의 주승용 의원이 거론된다. 박 지사의 출생지가 영암으로 서부권인 점이 고려되면서 동부권인 여수 출신의 주 의원이 맞설만 하다는 분석이다. '단체장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걸린 이석형 합평군수도 뜻을 내비쳤다. 3선의 이낙연·김효석 의원도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지역과 중앙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 예상 변수들

서거 1주년 겹쳐 '노풍' 다시 불까

'추모 민심' 선거 판세 흔들 수도

내년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과 겹친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주년을 앞두고 형성되는 추모 분위기에 따라 지방선거 판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당장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당내 단합은 물론 진보진영 대통령 등을 통해 거대 여권에 맞설 수 있는 단일대오 형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여권의 일전을 불사하는 등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까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살아있는 불씨'로 가져가겠다는 태세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촉발시킨 민심의 동요를 진정시킬 묘안을 찾지 못한다면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고전이 예상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맞물려 내각 개편과 검찰 책임자 교체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여기에 내년 4월까지 경제난이 회복되지 않고 대북 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경우, 민심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와 현 정부에 대한 반감 등이 뒤섞여 거대한 태풍으로 지방선거를 뒤 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간의 장례 기간 동안 봉하마을을 포함, 전국 분향소에 400만명이 넘는 추모 인파가 몰리고 29일 영결식 당시에는 서울광장과 서울역에 무려 50만명이 넘는 인파가 집결, 노풍의 위력을 증명했다.

민주 독식이나 무소속 돌풍이나 기초단체장 교체 몇 곳?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이석형 합평군수를 제외한 모든 현직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다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다선의 광역·기초의원들도 탄탄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단체장직을 넘보고 있다. 기초단체장 가운데 '3선의 벽'을 누가 넘느냐가 관심이다. 3선에 도전하는 기초단체장은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을 비롯해 황일봉 남구구청장, 정종득 목포시장, 신정훈 나주시장, 이성용 광양시장, 황주홍 강진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등 7명에 이른다. 신정훈 나주시장과 황주홍 강진군수를 중심으로 한 '무소속 바람'도 주목된다. 지난 4·29 재보선 결과, 민주당에 대한 광주·전남지역의 민심 이반이 분

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깨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다. 이런 이유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에서 민주당 독식 구도가 깨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도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운동의 여파가 얼마나 작용할 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동영·박근혜 안을 수 있을까

(민주당) (한나라)

복당·분당·내분 여부 촉각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내부 변수에 따라 지방선거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정동영 의원 복당 문제가 관건이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0월 재보선까지 정동영 의원의 복당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분당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분당으로 인한 반사 이익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당이 이뤄진다면 호남표의 분열과 내분으로 인한 내부 동력 상실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상당한 고전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정동영 의원 측에서는 한민족 경제 비전 연구소 발족을 통해 전국적인 조직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한화합 전 민주당 대표와의 접촉에도 나서며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을 명분으로 10월 재보선 이전에 정동영 의원을 안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한나라당도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에 따라 지방선거 성적표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친박 연대'가 위력을 보여준데다 지난 4월 재보선 경주 선거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의 위상이 다시 검증됐다. 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를 만폭시키는 공천을 하지 못할 경우, 영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친 박근혜 후보가 등장하면서 지방선거 전략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내부적으로 친박(친 박근혜)과 친이(친 이명박)의 극적인 화합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패배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5~6명 출마, 전남 3선 도전 관심 시·도 교육감 선거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시·도교육감도 주민 직접투표로 선출된다. 하지만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교육감과 교육위원 출마를 원하는 후보자는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또 기초 방식이 일반선거의 경우 정당 기초 순인 데 비해 교

육감·교육위원은 후보자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결정돼 혼선을 겪을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광주시 교육감 후보로는 안순일 현 교육감을 비롯해 윤영월 광주예술고 교장, 김영수 전 삼도초교 교장,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 장휘국·윤봉근 교육위원 등 5~6명이 거론되고 있다.

전남도 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관심사는 김장환 현 교육감의 3선 도전 여부다. 여기에 나승욱 전남도 교육위원, 신태학 전 여수교육장, 윤기선 전 전남도 교육연수원장, 정찬용 전 무안교육장, 서범석 전 교육부 차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 개최! 희망 광주, 국제도시 광주의 시작입니다. 광주상공회의소 UNIVERSIADE GWANGJU 2015